2013년 10월 19일 발행

workerssolidarity.org

서울시 종로구 광화문우체국 사서함 1243 우)110-612
전화 02-2271-2395 / 이메일 mail@workerssolidarity.org / 후원계좌 국민은행 694701-01-227958 (예금주 백은진)

노동자연대다함께

전교조 조합원들이 박근혜에게 한 방 먹이다

이제 노동운동의 단결로 싸울 때다

전교조 총투표(81% 투표율)에서 68%의 조합원이 정부의 규약시정명령 요구를 거부했다!

조합원들은 '법외노조를 피하려면 9명의 해고자 동료들을 내치라'는 유혹을 단호히 거부했다. 운동의 원칙과 대의를 지킨 것이다.

정말 이것은 오랜만에 우리 모두의 가슴을 뜨겁게 만드는 기쁜 소식이다. 박근혜의 마녀사냥과 공안 탄압 속에서도 이런 결과가 나왔다는 것이 더욱 의미 있다. 탄압과 이간질에 흔들리고 타협하는 일부의 모습이 낳았던 우려들을 단숨에 날려 버린 것이기도 하다.

12년 만에 민주파가 당선한 현대중공업 노조 선거 결과도 반갑다. 이 소식들은 박근혜의 역사 거꾸로 돌리기가 결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확인시켜 준다.

지금 박근혜 정부와 우파는 법외노조화라는 위험과 불편을 감수하면서 대의를 선택한 노동자들을 보며 당혹감을 느끼고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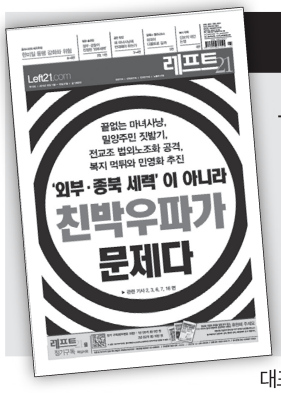
박근혜 정부는 법외노조화 협박을 통해 전교조를 최대한 흔들고 혼란에 빠뜨리려 해 왔다. 이를 통해 신자유주의적 교육 구조조정뿐 아니라 전 사회적 경제 위기 고통전가 정책을 뒷받침하려 한 것이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의 이런 계획은 이제 강력한 걸림돌을 만나게 된 셈이다. 물론 박근혜 정부는 예고했던 대로 10월 23일 이후 전교조에게 법외노조 통보를 밀어붙이려 할 것이다.

따라서 이번 투표로 드러난 전교조 조합원들의 소중한 의지를 강력한 단결과 투쟁으로 이어갈 과제가 남았다. 이제 전교조 지도부는 법적 대응뿐 아니라 총력 파업 등 조합원들의 의지에 걸맞는 투쟁을 건설해야 한다.

그리고 이번에 전교조 조합원들의 선택을 보며 감동과 함께 큰 힘을 얻은 우리 모두는 그런 투쟁에 아낌없는 지지와 연대를 보내야 할 것이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박근혜 정부의 파상공세와 갈라치기에 맞서 단결하고 투쟁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기 시작했다. 이것을 디딤돌 삼아 전진할 때다.



노동자와 촛불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노동자연대다함께의 선명 진보 신문

국제주의·반제국주의·반자본주의·노동자 연대

레프트21을 구입하고 정기구독·후원해 주세요

113호 주요 기사
- 전교조 법외노조화 공격 중단하라
- 동아시아와 제국주의: 한미일 동맹 강화와 위험
- 복지 먹튀: 진보의 대안 논쟁
- 공안 탄압: 왜 마녀사냥에 반대해야 하는가
- 밀양 송전탑: 정부·경찰이 진정한 '외부세력'

http://www.left21.com

대표전화 02-777-2792 | 기사제보 02-777-2791 | 팩스 02-6499-2791 | 이메일 left21@left21.com | 웹사이트에서 구독신청이 가능합니다.

국정원 트위트 5만5천여 건 발견, 국방부도 '댓글' 활동 …

드러나는 총체적 정치공작의 추악한 전모

지난 대선 때 국정원만이 아니라 국가보훈처와 심지어 국방부까지 대선에 개입해서 정치 공작을 벌였다는 게 드러났다.

국군 사이버사령부가 국가정보원 자금을 지원받으면서 '댓글' 활동을 벌인 게 드러난 것이다. 게다가 사이버사령부의 주요 요원들과 국정원 심리전단을 이끈 전 3차장 이종명이 모두 합동참모본부(합참) 소속의 민군심리전부에서 함께 활동했었다고 한다. 추악한 연결 고리가 짐작된다.

사이버사령부의 초대 사령관 연제욱이 올해 박근혜의 청와대 국방비서관으로 임명된 것도 의미심장하다. 결국 지난 대선 때 국정원, 경찰 등 억압기구들이 우파 정권 연장을 위해 총동원됐었다는 것은 더욱 확실해 졌다.

한편, 18일 국정원 게이트 특별수사팀은 국정원 직원 3명을 체포했다. 트위터에서 무려 수만 건의 정치 관련 글을 퍼나르기한 혐의다. 이 혐의로 원세훈 등도 추가 기소했다.

그 직후 검찰은 특별수사팀장 윤석렬을 경질했다. 지난 대선 때 부패우파가 얼마나 어마어마한 짓을 저질렀는지, 또 그것을 숨기려고 얼마나 안달하는지 알 만하다.

모든 약속을 뒤집고 있는 총체적 사기 정권

박근혜 정부의 총체적 말 바꾸기, 공약 먹튀가 계속되고 있다. 박근혜의 복지 먹튀는 요람에서 무덤까지 그야말로 전 세대에 걸쳐 있다.

기초노령연금, 4대 중증질환 보장, 반값 등록금, 고등학교 무상교육, 무상보육 등 박근혜 정부의 대선 간판 공약들이 대부분 사기로 드러나고 있다.

'저소득층 12개월 영아까지 분유 및 기저귀 지원' 사업과 '경로당 냉 · 난방비 지원 사업' 예산도 전액 삭감됐다.

노동자에게 했던 약속도 대부분 뒤집혔다. 쌍용차 국정감사 약속도, 현대차 직접고용 보장 약속도 사라졌다. 최저임금을 인상하고 정리해고 요건을 강화하겠다고 말도 거꾸로 가고 있다.

'2015년까지 모든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겠다'던 약속도 휴지조각이 됐다.

군 복무기간 18개월 단축 공약도 사라졌다.

반면 기업을 지원하는 돈은 대폭 늘렸다.

기업을 위한 정책 금융은 전년 대비 24.3조 원이나 확대했다. 이 돈이면 기초노령연금과 반값 등록금, 무상보육 등을 하고도 남는다.

이렇게 생각한다

박근혜 공세에 노동운동의 단결로 맞서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국민들에게 거짓말해 가면서 정권만 잡으면 된다는 낡은 생각은 사라져야 한다." "비리를 저지른 정치인은 영원히 격리시켜야 한다."

이것은 박근혜가 지난 대선 때 한 말들이다. 이 말대로면 박근혜 정부야말로 사라져야 한다.

지금 국정원게이트 의혹은 국정원, 경찰을 넘어 군 개입 의혹으로 번지고 있다. 이 상황에서 국정원은 도리어 '이적단체 적발을 위해 국내 대공수사권을 더 강화하겠다'고 나섰다. 채동욱 찍어내기에 이어서, 국정원 대선개입 특별수사팀장까지 경질됐다.

복지 먹튀에 이어서 '노동자 증세'와 시간제 일자리 확대, 철도 민영화도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다. 밀양에서는 수천 명 진압 경찰들이 환갑 넘은 노인들을 짓밟으며 평생 일군 삶터를 파괴하고 있다. 전교조를 법외노조로 만들려는 공격도 진행되고 있다.

경제 위기 심화 속에 1퍼센트 지배자들의 요구에 따라 박근혜는 갈수록 반동적 본색을 드러내고 있다. 이에 대한 반발이 정치적 급진화와 대중 저항으로 발전할 수 없도록 공안 탄압과 마녀사냥도 강화할 것이다.

뒤통수

그러나 박근혜가 '유신 스타일'은 살려도, '유신체제'를 당장 되살릴 수는 없다. 복지 먹튀는 대선 때 박근혜를 지지했던 층에서도 실망과 반발을 낳고 있다. 서청원같은 악취나는 인물들에 의존해 친정체제를 구축해야 하는 것도 박근혜의 약점이다.

문제는 정치적 반대파들이 박근혜의 약점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국정원 게이트도 제대로 파헤치지 못했고, 도리어 NLL · 진보당 마녀사냥에 굴복했다. 민주당 지지율은 여전히 바닥을 기고 있다.

따라서 최근 제기되는 민주당 중심의 '신야권연대'가 반우파 대중에게 새로움이나 매력을 주기는 힘들다. 이미 촛불운동은 민주당에 의존하며 쟁점 확대를 주저하다가 민주당의 백기투항식 원내복귀로 뒤통수를 맞은 바 있다. 이것을 되풀이할 이유는 하나도 없다.

최근 복지 후퇴, 전교조 탄압, 민영화 등을 놓고 진보진영이 공동 대응을 하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런 흐름을 10월 26일 대규모 공동 집회와 11월 노동자대회로 연결시키며 확대 · 발전시켜야 한다. 민주당과의 계급연합을 배제하고, 특정 세력의 패권주의를 견제하면서 이런 투쟁 조직을 위한 공동 투쟁체를 건설할 필요도 있다.

국정원 대선개입 규탄 촛불운동은 이미 박근혜의 정통성에 흠집이 내며 정권 내부에 균열을 일으켜 왔다. 노동운동이 단결해서 박근혜에 맞선 분노와 투쟁들을 모아내며 대중 투쟁을 발전시켜야 한다.

왜 마녀사냥에 함께 맞서는 것이 중요한가

국정원의 이석기 의원과 통합진보당 마녀사냥은 갈수록 부실함이 드러나고 있다.

검찰은 내란음모를 모의했다는 'RO'를 기소조차 못했다. 증거는 여전히 의심스런 '녹취록'뿐이다.

그런데도 마녀사냥은 지속 · 확대되고 있다. 진보당 해산까지 추진하고 있다.

민주당은 줄곧 우파에 굴복하고 마녀사냥에 힘을 보태기나 해 왔다. 민주당은 원래 그렇다치더라도, 진보진영 안에서도 마녀사냥에 맞선 연대가 부족하다는 점은 매우 안타깝다.

진보진영 일부는 진보당의 사상이 '시대착오적'이고 '탄압의 빌미를 줬다'며 방어에 관심을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물에 빠져 허우적대는 사람에게 왜 거길 들어갔냐고 탓할 순 없다.

〈조선일보〉는 제주 해군기지 건설 반대, 한미FTA 반대, 4대강 건설 반대, 국가보안법 폐지 주장 등을 근거로 진보당을 '종북'이라고 비난했다. 잘못된 정부와 정책에 반대하는 게 '종북'이란 식이다. 이것은 진보당이 저항운동의 일부이기에 탄압 받는다는 것을 보여 준다.

진보진영 일부는 진보 운동도 헌법과 체제 안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헌법 내 진보'론도 편다. 그러나 정부가 '헌법에 어긋난다'며 진보당 해산까지 시도하는 상황에서 이런 주장은 부적절하다. 미국의 진보 학자 하워드 진은 '법과 정의가 충돌할 때 우리가 추구해야 할 것은 정의'라고 했다.

지금 박근혜 정부는 마녀사냥을 통해 경제 위기 고통전가를 위한 유리한 환경을 만들려 한다. 밀양에서도 새누리당과 보수언론은 '종북세력이 개입해서 강경 투쟁을 부추기고 있다'며 반대 운동 진영을 이간질 · 약화시키려 했다.

이런 상황에서 공안 탄압에 함께 맞서는 데 무관심한 것은 저들의 책략에 말려드는 것이다. 서로의 사상과 노선에 대해서 자유롭게 토론 · 비판하기 위해서라도 탄압에 공동으로 맞서야 한다.

모입시다!

국정원 선거 개입, 공약파기, 노동탄압 규탄

범국민 촛불 집회

10월 26일(토) 저녁 7시 / 장소 서울역

노동탄압분쇄! 민주주의 파괴 저지!
민영화-연금개악 저지!
공공부문-비정규직 노동기본권 쟁취!

민주노총 총력투쟁 결의대회

10월 26일(토) 오후 4시 30분 / 서울역